

## 특 허 법 원

### 제 2 2 부

### 판 결

사 건 2017나1926 특허권이전등록 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6. 21. 선고 2017가합15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13.  
판 결 선 고 2018. 3.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특허권의 15/100 지분에 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마취과 의사로서, 마취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관튜브 고정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개발하였다. 피고는 2007. 1. 8. 위 장치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주식회사 엠아이디에스(이하 '엠아이디에스'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11. 12. 위 장치에 관하여 별지 기재 특허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 3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엠아이디에스의 주식 50%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경영권 및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 3. 26.경 C에게 '마취과 의사인 B(피고)이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고, 원고와 공동으로 생산·판매할 예정이어서 높은 수익이 예상되므로 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5%의 지분과 향후 수익의 5%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이를 믿고 2008. 3. 28.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엠아이디에스의 경영권 및 주식의 50%를 받았다.

라. C은 원고의 말과는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수익금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4. 7. 24. C과 합의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19.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909호로 기소되어 2015. 10. 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6. 3. 29.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07서2158호 차량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며, 2016. 3. 30. C은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원고가 가진 엠아이디에스의 주식 비율에 상응하는 특허권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엠아이디에스의 주식 50%를 받았다가 일부를 피고에게 다시 넘겨주어 현재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15/100 지분에 관하여 특허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엠아이디에스의 주식 지분에 상응하는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장치의 생산·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이익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높은 수익이 예상되니 투자를 하면 이익을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C에게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C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에게 주었을 뿐 위 돈을 사용한 적도, 이익을 얻은 적도 없다. 피고가 C에게 1억 원 전부를 반환해야 하나, 피고는 5,000만 원만 반환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C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엠아이디에스의 주식 50%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엠아이디에스의 주식 35%를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회수한 35%의 주식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이는 1억 원이 넘는다. 피고가 C에게 직접 5,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경영권 및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C에게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한 사실, ② C은 원고의 말을 믿

고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③ 원고는 엠아이디에스의 지분권자로서 피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를 맡아 직접 경영을 하였고, C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에게 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엠아이디에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6. 7. 20.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엠아이디에스의 경영권 및 주식 50%를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년 11월경 원고로부터 엠아이디에스의 주식 25%를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투자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나상훈

판사      이지영

## 별 지

특허 제10-0777454호

출원번호 : 제2006-0123673호

출 원 일 : 2006. 12. 7.

등 록 일 : 2007. 11. 12.

발명의 명칭 : 기관튜브 고정장치

특허권자 : B

경남 거제시

발 명 자 : B

경남 거제시